

의정활동기록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Enhancement Strategies for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Service*

임소연(Soyeon Lim)¹, 김유승(Youseung Kim)²

E-mail: soyeonvb@cau.ac.kr, kimyus@cau.ac.kr



1 제1저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
2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4.10.18
최초심사 2024.10.25
게재확정 2024.11.15

ORCID

Soyeon Lim
https://orcid.org/0009-0007-6646-0711

Youseung Kim
https://orcid.org/0000-0002-3087-3553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2023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초 록

본 연구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의정활동기록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기록의 정의와 특성을 검토하는 이론 연구와 미국 입법 아카이브 센터, 영국 의회 아카이브, 우리나라 국회기록보존소의 의정활동기록서비스를 비교,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국회 구성원,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연구를 통해 의정활동기록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살피고, '검색 및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활용촉진서비스'의 현재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였다. 결론에 같음하여, 본 연구는 의정활동기록의 명확한 정의 정립, 검색도구 개선, 국회의원실 대상 서비스 강화, 연구지원서비스 확대, 국회기록보존소의 독립성 강화, 이용자 요구 분석을 통한 서비스 정책 수립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services prov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oretical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along with case studi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services of the US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 UK Parliamentary Archives, and Korean National Assembly Archives.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National Assembly Archives practitioners,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researchers, the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s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services and discussed current issues and improvements in "search and access services," "value-added services," and "utilization promotion servic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clear definition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enhancing search tools, strengthening service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s, expanding research support services, reinforcing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developing service policies through user needs analysis.

Keywords: 국회,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서비스, 의정활동기록, 의정활동기록서비스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Archives, Records service,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service

1. 시작하는 글

‘의정’이란 의회정치를 줄여서 부르는 단어다. ‘의회정치’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국가권력의 중심인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방식이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1785-1786).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국회 구성원이자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위원회, 본회의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국가적 가치가 있는 기록으로 간주되는 공공기록에 해당된다.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국가기록원, 2018, NAK/S 21:2018, v1.1)은 공공기관에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라 국회도서관을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의정활동기록의 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맡기고 있다. 의정활동기록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등 국회 내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다만, 이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의정활동기록은 의정활동 중 생산되거나 제출된 회의록, 상임위원회의 공식자료, 정책연구, 의원외고 등 최종적인 형태의 기록뿐이다. 국회의원이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지역구 정치활동에 관련된 자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하는 의정활동기록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국회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직제』를 근거로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수집·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의정활동기록을 수집하고 있다(김장환, 2018, 46).

그러나 의정활동기록의 기증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실은 19대 20곳(6.67%), 20대 24곳(4.67%), 21대 28곳뿐이다(박선운, 2024). 의정활동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회기록보존소를 이용하는 국회의원실의 비율은 극히 낮으며, 국회기록보존소가 제안한 매뉴얼에 따라 기록을 등록하는 의원실도 전무한 실정이다(장연희, 윤은하, 2024, 195). 국회의원실에서 다양한 의정활동기록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는 이러한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회기록보존소가 의정활동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가 없고 국회의원실 내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과 협조가 부재하여 수집에 한계가 있다.

각 국회의원실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은 자동으로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는 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회의원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김장환, 2018, 64). 또한 국회의원실 인원의 잦은 교체, 인수인계 부재 등으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회의원의 공식기록, 비공식기록, 개인기록 사이의 모호성도 기록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의정활동기록의 수집 및 관리의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를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정활동기록서비스는 의정활동기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의정활동기록관리의 효용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제의 측면 모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의원실의 의정활동기록을 비롯하여 현재 국회기록보존소가 제공하는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정활동기록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선행연구분석

기록학연구 분야에서 기록서비스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국가기록원과 행정부 기록서비스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회의 기록서비스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의 기록서비스를 주된 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초기연구로서 이원영(2005)은 기록학 관점에서 정보서비스 이론과 미국, 영국 의회 사례를 살펴보고, 기록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와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접근정책 수립,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선, 이용자와 의사소통 활성화 등을 국회 기록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지혜(2011)는 입법기관 기록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와 해외 입법기관 기록서비스를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였으며, 김유승과 설문원(2013)은 국회 기록정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입법기관의 온라인 기록서비스 사례를 검색지원서비스, 부가정보서비스, 확장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회기록정보 온라인서비스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검색지원서비스 제공, 세분화된 이용자 맞춤형 부가콘텐츠 개발, 입법활동 관련 웹 아카이브 서비스 구축, 다양한 전시·교육·출판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문선희(2019)는 국회 회의록 온라인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회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윤서와 김지현(2021)은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논하며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서비스 강화,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여상아(2022)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임시의정원 디지털 아카이브'와 영국 의회기록보존소의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콘텐츠 서비스를 콘텐츠 영역, 검색 영역,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임시의정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콘텐츠 갱신 및 확장, 홍보와 이용자 참여 제고 등의 개선 방안 제시하였다.

한편 의정활동기록을 주된 주제로 다룬 다수의 연구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한 법 제도적 측면과 의정활동기록의 수집 및 관리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은정과 임진희(2009)는 국회의원기록을 공공과 개인기록의 관점에서 조망하며, 국회의원실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내부 업무의 효율성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고, 개인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장환(2014)은 의정활동기록을 포괄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관기능분석을 통해 국회의 핵심적인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기록화 전략 모형을 설계하였다. 김남희(2016)는 의정활동기록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마땅히 남아야 할 기록이 유실되고, 한국의 정치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기록물법의 제정과 국회의원기록관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김장환(2018)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법적 근거 미비, 헌정기념관의 수집 활동 중복, 인식 미비 등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으로 법규 제정 및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에 대한 컨설팅 지원,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안경혜(2018)는 국회의원 기록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최혜영과 이승일(2019)은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정활동기록 이관 및 수집 체계 개선을 논하였다. 박소정(2021)은 사례연구와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면담을 통해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수집 기준의 구체화, 타기관과의 협력 강화, 웹기록 수집 등 수집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로 장연희와 윤은하(2024)는 국회의원실 보좌직원들의 기록관리 인식을 고찰하고,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회 기록관리가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조직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회기록보존소의 위상 및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법제적인 측면과 의정활동기록의 수집 및 관리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의정활동기록의 정의 및 특징

의정활동기록의 정의는 다수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안경혜(2018, 11)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 기관, 입법기관, 국정통계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을 의정활동기록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국회 소속기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생산된 기록도 포함된다. 같은 맥락에서 최혜영과 이승일(2019, 100)은 의정활동기록을 국회의원, 정당, 위원회, 소속기관 등이 국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 및 접수한 모든 기록으로 정의하면서, 의정활동기록을 법률 및 국회 규칙에 의거하여 관리되는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뿐만 아니라, 현행의 관리 범주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기록, 정당기록 등의 기록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반면에, 장연희와 윤은하(2024, 188)는 의정활동기록이 국회의원기록, 정당기록, 민간기록 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며, 국회 소속기관인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은 의정활동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024년 현재 국회 관련 법령은 의정활동기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은 관리 대상 기록을 “국회의장, 부의장, 위원회, 각각의 소속기관이 생산한 기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정활동기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기록물관리내규』에서도 의정활동기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의정활동기록을 언급한 국회 관련 법령은 『국회도서관직제』다. 『국회도서관직제』 제10조 제2항 제6호는 국회기록보존소 분장 업무의 하나로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활동기록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헌은 「국회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기본정책[v.2]」(이하 「기본정책」)과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2020)」(이하 「매뉴얼」)이다. 「기본정책」은 국회의원기록, 정당기록, 민간기록 등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된 기록을 의정활동기록으로 규정하고(국회기록보존소, 2017), 국회 소속기관이 생산, 접수한 공공기록을 의정활동기록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매뉴얼」에서는 의정활동기록을 국회의원실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기록으로 명시하고, 이를 입법활동기록, 국정감독활동기록, 정치활동기록, 기타활동기록으로 구분하였다(국회기록보존소, 2020). 「매뉴얼」에 따르면, 첫째, 입법활동기록은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입법기능과 관련된 기록으로, 법안발의, 정책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기록이며, 둘째, 국정감독활동기록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국정감사·조사 실시계획기록,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선서기록 등이 있다. 셋째, 정치활동기록은 의원이 지역구관리, 정당업무, 언론 및 미디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으로 선거운동 기록철, 정당 지도부와의 의사소통 기록, 언론담당 보좌진 기록철 등이 포함된다. 넷째, 기타활동기록에는 의회 관련 국제회의의 참석 기록과 같은 의원외교기록, 공개행사기록, 개인 이력 정보 등이 포함된다(국회기록보존소, 2020, 13).

그러나 의원실의 의정활동기록은 관리와 이관의 대상이 아닌 기증과 방문 수집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부분 소실되고 있다. 의정활동의 주체인 국회의원실의 기록은 제외된 채, 국회의원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조사관, 연구관, 예산분석관 등이 생산한 기록이 주된 의정활동기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이경선, 2017, 213).

이상에서 살펴본 의정활동기록의 정의를 종합하면, 의정활동기록을 국회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기록으로 보는 관점과 국회의원실 관련 활동 중심의 기록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기록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국회의원실뿐만 아니라 국회 소속기관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생산된 모든 기록이 의정활동기록에 포함된다. 반면, 국회의원실 관련 활동 중심의 기록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국회의원실, 정당, 위원회 등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의정활동기록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의정활동기록을 제도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재정이 투입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된 기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록과 함께, 국회의원실, 정당, 위원회 등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 의정활동기록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출처를 가진다. 국회의원실, 정당, 위원회, 소속기관 등 다양한 출처들이 각각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기록이다. 따라서 다양한 출처와 유형 및 형태를 가지며,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높은 복잡성을 지닌다(장연희, 윤은하, 2024, 189). 둘째, 헌법기관의 설명책임성을 담보하는 증거다. 의정활동기록은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며, 의정활동의 설명책임성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기록이다(이원영, 2004, 29). 셋째, 연구적,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당대의 정치적 상황, 활동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적 가치와 연구적 가치를 지니며, 후세에 남길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이다(이연창, 2007, 3).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의정활동기록에 대한 접근은 국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존재하며, 모든 지위와 활동의 정당성은 의정활동기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의한 활동을 기록으로 증명하고 국민에게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안경혜, 2018, 59). 기록서비스는 이용자와 기록전문가, 기록 및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잠재적 이용자에게는 기록관과 소장기록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기록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확장된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기록은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회 내에서도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취약한 상태다.

Pugh(2005)의 기록서비스 이용자 유형 구분에 따르면,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주이용자는 국회 구성원, 연구자, 학생, 교사, 족보학자, 역사가 등이 포함된다. 국회 산하기관의 구성원들은 의정활동기록의 생산자이자 의정활동기록의 주요한 이용자이기도 하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내부고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듯이(김세영, 2018, 2-3), 기록서비스 측면에서도 모기관의 직원들이 제1영역의 이용자 집단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기록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구분 방식은 존재하지 않지만(김지현, 2013, 309), 국내 다수의 연구자는 기록서비스의 유형을 ‘검색 및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활용촉진서비스’ 또는 ‘확장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기록서비스의 유형을 준용하여 의정활동기록서비스를 논하고자 한다.

4. 의정활동기록서비스 사례연구

4.1 미국 입법 아카이브센터

양원제인 미국은 의정활동기록을 상원과 하원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원의 기록관리는 ‘상원 규칙 제11장(Senate Standing Rule XI)’, 하원은 ‘하원 규칙 제7장(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VII)’에 따라

이루어진다. 상원 의정활동기록은 1937년 처음으로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으로 이관되었고, 하원 의정활동기록은 '1946년 입법부 재조직화에 관한 법률(The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46)'의 시행 이후 NARA로 이관되기 시작하였다. 이관된 의정활동기록은 NARA의 입법 아카이브과(Division of Legislative Archives)에서 관리되었으며, 1988년 입법 아카이브센터(The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 이하 CLA)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Advisory Committee on the Records of Congress, 2018).

CLA는 미국 의회를 위해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의회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로, 의원실의 비현용 문서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행한다. 둘째, 의원을 대상으로 간행물을 제공하는데, 간행물에는 미연방 관보, 미국 정부 매뉴얼, 대통령 관련 문서, 연간 대통령 공식 문서 모음이 포함된다. 셋째, 의원을 포함하여 의원의 가족, 직원들이 미국 전역의 국립 아카이브를 방문하여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LA의 검색 및 열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정활동기록은 '의회기록', '입법기관기록', '미국정부간행물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회기록'은 상원기록, 하원기록, 의회 합동 위원회기록으로 이루어지며, '입법기관기록'은 정부 인쇄국(Government Publishing Office, 이하 GPO), 의회예산정책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임시국가경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기록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정부간행물기록'은 정부 인쇄국이 간행한 기록이다.

2003년부터 GPO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록서비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임기가 종료된 의정활동기록 중 공개기록은 CLA와 GPO의 GovInfo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비공개기록은 CLA에서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의 의정활동기록은 의원들이 기증한 기록을 소장하는 전국의 의회 보존소에서도 관리되고 있다. CLA는 이러한 기록을 홈페이지의 'What We Don't Have' 메뉴를 통해 위치,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Other Resource'에서는 CLA에서 제공할 수 없는 기록을 의회, 입법부 조직, 의회 논문 및 연구실, 기타 온라인 정보자원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CLA는 키워드, 생산자, 상원 및 하원, 합동·입법위원회 등의 특정 기록군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Advisory Committee on the Records of Congress, 2018, 10).

CLA는 부가가치서비스의 일환으로 웹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있다. '의회 웹 하베스트(Congressional Web Harvest, 이하 CWH)'는 CLA에서 운영하는 웹 아카이빙으로, 2006년 109회 의회부터 상·하원, 각종 원내 의원 조직 등의 웹사이트를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웹 아카이빙은 Internet Archive와 협력하여 수행된다(Advisory Committee on the Records of Congress, 2018, 8-10). 또한 CLA는 'Research Guides and Tools'를 통해 연구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구가이드는 상원 기록 가이드(Guide to the Records of the U.S. Senate), 하원 기록 가이드(Guide to Record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의회 합동위원회 기록 가이드(Guide to the Records of the Joint Committees of Congress)를 포함한다. 특히 CLA는 자료를 활용하여 세분화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각 콘텐츠는 권장 학년, 소요 시간, 학습 단계, 토론 형식 등을 안내하며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활용촉진서비스로서, CLA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용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2024년 8월 현재 플리커(Flickr), 엑스(X), 텀블러(Tumblr) 등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다.

4.2 영국 의회 아카이브

영국 의회아카이브(UK Parliament Archives, 이하 PA)는 국립아카이브(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 소속이 아닌, 의회 소속기관으로 의정활동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34년 웨스트민스터 궁의 화재로 인해 기록들이 소실된 사건을 계기로, 재건된 웨스트민스터 궁에 기록관리를 위한 빅토리아 타워(Victoria Tower)가 세워졌다. 이후 1946년, 의회 기록관리를 위해 ‘상원기록관(House of Lords Record Office)’과 전담 직위인 ‘기록서기관(Clerk of the Records)’이 신설되었고, 2006년에는 부서명이 ‘영국 의회아카이브(Parliamentary Archives)’로 변경되었다(Parliamentary Archives, 2018).

PA의 주요 목표는 의회에 의해 생산된 의정활동기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고 의회의 역사와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국 의회를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PA는 의원실 기록을 수집 대상 중 하나로 설정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일부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의원실의 의정활동기록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출신 지역 등의 지방 아카이브에 기증하여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Parliamentary Archives, 2012). PA는 ‘상원과 하원(commons and Lords)’, ‘단체 및 직원(Societies and Staff)’, ‘웨스트민스터 궁(Palace of Westminster)’, ‘개인 기록(Private Papers)’ 등으로 수집 영역을 나누어 보유 기록에 대한 검색,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가가치서비스로서 PA가 제공하는 기록 콘텐츠는 ‘웹 아카이브(Web Archive)’, ‘어스킨 메이(Erskine May)’, ‘온라인 기록(Records Online)’,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웹 아카이브(Web Archive)’는 영국 의회의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어스킨 메이(Erskine May)’는 영국 의회의 법률, 절차, 특권 등 일종의 규정집을 서비스하는 콘텐츠다. ‘온라인기록(Records Online)’은 중요 기록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제공하며,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은 PA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의장실 등 여러 부서에서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고, 기록의 통합적 접근을 제공하는 사이트다.

PA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활용촉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타지역 기록보관소의 보유 기록을 활용하여 사람, 지역사회, 의회 간의 연결을 탐구하며, ‘노포크 기록관(Norfolk Record Office)’, ‘버밍햄 아카이브와 유산(Birmingham Archives and Heritage)’, ‘그란모란지 아카이브Glamorgan Archives)’ 등의 서비스를 안내한다. 봉사 프로젝트의 결과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에서 게시되고 있다. 또한, PA는 엑스(X),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2022년 3월, PA는 의정활동기록 및 일부 관련 서비스를 TNA로 이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록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 이관 작업은 2025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4.3 국회기록보존소

1948년부터 1999년까지 의정활동기록은 책임부서 없이 분산적으로 관리되었다(국회도서관, 2020, 16). 2000년 1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회사무처 산하에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어, 국회기록관리 책임기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김유승, 김장환, 2013, 84). 2011년에는 전부개정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라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회도서관 소속이 되었으며, 『국회도서관직제』를 근거로 의정활동기록을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0, 17).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직원, 외부 공공기관, 일반 국민으로 이용자 유형을 구분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0, 22). 국회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준영구 이상 공개기록 중 일반문서는 국회기록보존소 웹 사이트에서 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원문이 있는 경우 즉시 열람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원문이 없거나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사진 열람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여상아, 2022, 335).

의정활동기록은 각 소속기관별로 구축된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대부분 국회도서관과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한다(장윤서, 김지현, 2021). 국회사무처에서 20개 이상의 사이트, 국회도서관에서 10개 이상의 사이트를 통해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웹사이트의 ‘국회회의록’, ‘국회의안’ 카테고리를 통해 ‘국회회의록시스템’과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안내하고 있다. 의정활동기록을 기증한 의원이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기록보존소에서 해당 기록을 제공하는 제한적인 열람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회 소속기관에서 과거에 생산한 기록을 찾고자 할 경우, 열람 신청을 통해 해당 기록을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의정활동 및 이용자의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국회 연표’, ‘특별위원회 기록’, ‘구술기록’, ‘국회 주요 기록’, ‘전시관’ 등이 있다. ‘국회 연표’는 국회 주요 의정활동, 사건, 이슈 등을 선별하여 관련 기록과 함께 제공하는 콘텐츠로, 단순히 사건과 기록을 나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연표명, 기록명, 내용 및 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기록’은 국회의 특별위원회별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록을 제공하며, 특별위원회명, 회수, 기록명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구술 기록’은 인물, 대수, 영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수, 직책, 구술자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구술 영상과 개요, 구술자의 약력, 해제문, 등 구술자와 구술 작업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국회도서관, 2022, 134).

국회기록보존소는 원활한 국회 기록관리를 위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처리과 기록관리 책임자를 위한 실무교육, 8급, 9급 신입실무자 기록관리 교육, 승진 및 입법고시를 통해 임명된 신입관리자를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국회 소속기관과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거나 대수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육은 보좌진협의회,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과정을 개설한 후 진행된다.

한편, 활용촉진서비스의 측면에서, 국회기록보존소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소장 기록물에 대한 원문과 유관기관 소장 자료의 소재 정보 목록 등 통합적 의정활동기록이 포함된 국회기록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회의장단 및 주요 인사 구술채록을 수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통해 채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술총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4.4 소결

정리하면, ‘검색 및 열람서비스’ 유형에서는 CLA와 PA 모두 이용자가 의정활동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키워드, 주제, 형태, 생산자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특정 기록 콘텐츠 내에서만 키워드 검색 및 패킷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CLA와 PA는 이용자가 의정활동기록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검색가이드를 제공하며, 기록을 주제별로 모아 의도적인 검색 없이도 기록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기록의 생산 배경을 설명하며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가가치서비스’ 유형에서는 세 기관 모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CLA와 PA는 웹 아카이빙과 상세한 연구가이드를 통해 부가가치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다. CLA는 ‘What We have’, ‘What’s Online’, ‘What We Don’t Have’, ‘What’s

not Online' 카테고리를 통해 기록에 접근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PA는 자주 조사되는 주제 및 기록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과 기록에 접근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연구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활용촉진서비스' 유형에서는 CLA, PA, 국회기록보존소 모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다.

이상 세 기관의 의정활동기록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기관 모두 의원실의 모든 의정활동기록을 서비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 의원실이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원실에서 생산된 의정활동기록의 제한적 수집 및 관리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미국과 영국은 통합검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GPO의 GovInfo를 통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기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의정활동기록 및 일부 관련 서비스가 TNA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록이 한 곳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개별적 법령에 근거하여 각각의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수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통합관리 및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연혁이 짧아,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타 기관과의 협력도 미비한 상황이다.

셋째, 미국과 영국은 의정활동기록의 정의나 수집 기준이 명확하다. 미국 의회의 경우에는 기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은 의정활동기록으로 간주되며, 사적인 성격의 서류는 제외된다. 영국의 경우 의정활동기록 수집정책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의정활동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정활동기록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5. 의정활동기록서비스 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연구

다음에서는 면담을 통해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의정활동기록서비스에 대해 심층적 의견을 수집, 분석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보다 해당 기록을 제공하고 활용하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5.1 연구설계

면담 대상자는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주체인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4명, 국회 구성원 2명, 연구자 2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국회 구성원은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관과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이 포함되며, 연구자는 국회 기록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 면담자들의 경력은 최소 7년에서 최대 20년에 이르며, 의정활동기록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면담은 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4주간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득이하게 대면 면담이 어려운 실무자에게는 면담 시 사용된 질문지를 전달하여 서면으로 대체하였다. 면담의 평균 소요 시간은 약 68분이었다(<표 1> 참조).

<표 1> 면담 현황

면담자	직업	경력	면담 방법	면담일	면담 시간
A	국회 구성원	8년	대면	2024년 9월 3일	60분
B	국회 구성원	7년	대면	2024년 9월 3일	25분
C	연구자	20년	대면	2024년 8월 27일	70분
D	연구자	16년	대면	2024년 9월 2일	102분
E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14년	대면	2024년 8월 14일	68분
F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10년	대면	2024년 8월 21일	78분
G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10년	대면	2024년 9월 5일	50분
H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14년	서면	2024년 9월 6일	-

면담을 통해 현재 의정활동기록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질문지를 기반으로 하되 면담 진행 상황에 따라 질문을 수정하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 면담자들의 응답을 유도하였다. 또한, 대면 면담 이전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면담자들이 질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자료는 ‘의정활동기록서비스 인식’, ‘의정활동기록서비스 문제점’, ‘의정활동기록서비스 개선점’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집하였다. 분석에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4를 활용하였으며, 비구조화된 면담 자료를 코딩화하고 분석함으로써 의미 구조를 도출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5.2 면담분석

5.2.1 의정활동기록서비스 인식

면담자들은 공공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정활동기록서비스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원실의 책임 설명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공적 업무와 관련된 의정활동기록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 면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남기 기록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면담자는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의정활동기록의 서비스는 당연히 필요하죠. [...]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활동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고, 국민이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면담자 C)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의정활동기록서비스는 당연히 필요하죠. (...)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록을 관리해서 활용하는 게 큰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G)

모든 면담자는 의정활동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국회기록보존소의 필수적 임무라고 응답했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기본적 사명이며, 국회기록보존소가 입법부의 기록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면담자 G). 또한, 면담자들은 국회기록보존소가 입법부의 영구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기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면담자 E). 국회의 핵심적 기록이 의정활동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의 핵심적인 기록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기록이라고 생각해요. [...] 입법부 영구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국회기록보존소의 존립 목적에도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H)

의정활동기록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체 요인이 논의되었다. 면담자들은 의정활동기록의 공개와 관련해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기록의 공개에 있어 국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행정부에 비해 국회는 기록의 개방과 공유에 소극적이예요. 행정부는 정부 3.0이나 정보공개시스템, 원문 정보공개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상당 부분이 공개로 전환이 되어 가는 추세잖아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가 바로 원본 공개 시스템으로 공개되는 정도니까요.” (면담자 F)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이지만, 그와 관련된 기록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은 사실을 말하는데, 기록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원하는 목적에 맞추려고 하니까 왜곡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점이 담당자로서 어렵더라고요.” (면담자 G)

또한, 기록이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기록을 남기거나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록의 보존과 활용이 단순히 관리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신뢰와 관련된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미국이나 영국은 정부가 바뀌어도 전 정부의 기록을 정치적인 무기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록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어버렸어요. [...] 국회의원 기록은 어떻게 보면 작은 대통령 기록이거든요. 만약에 자신의 기록을 남겼을 때 그게 빌미가 돼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러니까 현재는 신뢰 시스템이 없다고 할 수 있죠.” (면담자 C)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면담자들은 국회기록보존소의 의정활동기록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서비스를 위해서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초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면담자 B). 마지막으로, 국회의 기록관리 인식이 부족한 원인으로 제도적, 연혁적 지체 현상이 논의되었다. 면담자들은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사무처에서 국회도서관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면담자 A, C). 이로 인해 국회기록보존소가 기록관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연혁적 배경도 이야기되었다.

“국회기록보존소가 사무처에 있을 때도 권한이 부족했죠. 도서관으로 옮겨지면서도 권한을 모두 챙기지 못했어요. 2011년에 국회기록관리규칙이 제정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국회기록관리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의정활동기록관리는 더 뒤쳐져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관리의 인식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죠.” (면담자 C)

5.2.2 의정활동기록서비스 문제점

(1) 검색 및 열람서비스

대부분의 면담자는 의정활동기록을 찾기 위해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여러 국회 검색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국회기록보존소의 검색 및 열람서비스가 다른 국회 시스템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열린 국회 정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보가 더 집약된 느낌이 들어요. 의정활동별로 공개되고 국회의원으로 쪽 집약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을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 그래서 국회기록보존소의 검색 및 열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지는 않아요.” (면담자 A)

면담자들 대부분은 국회기록보존소의 검색 및 열람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었고,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국회의 소속기관이나 의원실에서 자주 찾는 기록들은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있어요. 국회 회의록 시스템, 국회의원 정보시스템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서 찾는 게 훨씬 빠르죠.” (면담자 F)

국회의원실에서 생산된 의정활동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접근하려고 해도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제공되는 기록이 제한적이거나 원하는 기록을 찾기 어려워 국회기록보존소를 굳이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언급이 있었고(면담자 A), 의원과 관련된 토론회 자료, 토론회 개최 내용, 연구 활동 보고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의정 보고서 등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되었다(면담자 B). 또한, 면담자들은 국회 내 여러 검색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이용자들이 각각의 시스템에 따로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하였다.

“회의록을 확인하려면 회의록 시스템에서 보고, 법안을 확인하려면 의안정보시스템으로 가야 하고, 각각의 검색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면담자 A)

“국회에서 서비스 시스템을 왜 여러 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 그건 이용자 측면에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디에서 검색하는지, 또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면담자 D)

현재 국회의원실에서 기증된 의정활동기록은 보유 현황만 파악될 뿐, 체계적인 조직화가 부족하여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면담자 G). 특히, 의정활동기록 수집을 담당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하여, 대량으로 수집된 기록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서의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열람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기록의 경우 기증한 의원이 본인의 의정활동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만 해당 기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면담자 H). 국회 소속기관에서 과거에 생산한 기록을 찾고자 할 경우에도 열람신청을 통해 기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면담자들은 열람신청 방식의 비효율을 비판하면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색 및 열람서비스의 문제점은 기증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회의원실 의정활동기록의 한계와 맞닿아 있었다.

기록의 가장 큰 특성이 맥락이지만, 현재 의정활동의 결과물만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면담자 D). 면담자들은 의정활동의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맥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스템을 보면 결과물만 있잖아요. 결과물만 있고 과정이 없어요. [...] 의정활동기록에 다 접근하고 있다는 착시 현상이죠. 의정활동기록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만 생산되는 의정활동기록이 다라고 하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면담자 C)

면담자들은 현재 국회의원실에서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기증하는 의정활동기록에는 국회의원실 의정활동의 전체 맥락과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면담자 D). 다양한 검색도구와 검색가이드의 부재도 검색 및 열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록을 검색할 때,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계층별 검색 기능이나, 검색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이러한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의원실의 자료나 국회 토론회 자료를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는지를 이용자들이 모르잖아요. [...]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국회 간행물의 목록, 전체 9,760건만 쭉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가이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A)

“탐색, 브라우징이라고 해서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용자가 어떤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 찾아서 접근하는 방식이 국회기록보존소 웹사이트에 전혀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면담자 F)

또한, 면담자들은 국회기록보존소가 주로 콘텐츠와 전시 위주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색도구의 개발이나 이용자를 위한 검색가이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면담자 E).

(2) 부가가치서비스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는 전시회 및 임시의정원 아카이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원실에서 기증된 의정활동기록은 콘텐츠나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면담자 E). 그러나 일부 면담자들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웹사이트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신 자료가 반영되지 않고 옛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어 콘텐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재방문을 유도하는 요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면담자 D).

“지금 국회기록보존소 웹사이트는 가장 핵심적이어야 할 컬렉션이 부족하잖아요. 기록의 건수만 남아 있고 [...] 이러면 굳이 국회기록보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D)

“한 번 방문한 사람은 다시는 방문 안 해요. 새로운 전시가 이어지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고 또 가는 거잖아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해요. 국회기록보존소가 콘텐츠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면담자 C)

전시가 사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특정 인물에만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의정활동기록 기증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별 전시를 개최했으나, 사람 중심이 아닌, 주요 사건이나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같은 테마 중심의 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면담자 C, D).

국회기록보존소의 부가가치서비스 중 특히 연구지원서비스 부재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의정활동기록은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연구적 가치도 상당히 크지만, 현재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면담자들은 연구자나 학계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통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대통령 기록을 활용한 우수 논문 공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기록보존소는 연구지원서비스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면담자 F)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록관리 교육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그 한계가 두드러졌다. 300개의 의원실에서 몇 명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좌진들의 기록관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의원 보좌진 교육이 있는데, 한 두세 번 했어요. 보좌진 교육 자체가 쉽지 않아요. 보좌진들이 4급, 5급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8급, 9급 혹은 인턴, 말단 보좌진들이 와서 교육을 들어요. 몇 명 오지도 않아요. 여러 이유로 보좌진 교육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면담자 E)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보다 더욱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보좌진들이 기록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교육한 경험이 있죠. [...]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연계해서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야간에 하거든요. 2시간 정도로 예산 실무, 보도자료 작성 등과 같은 국회의원실 보좌진에게 필요한 교육들이 있거든요. 한 20분 정도로 끼워서 교육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죠.” (면담자 G)

“의원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괜히 기록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존재하고, 기록을 넘겨줬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 교육도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잘 신청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면담자 A)

결국, 부가가치서비스의 문제점은 국회기록보존소와 의정활동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실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회기록보존소의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면담자 A).

(3) 활용촉진서비스

국회기록보존소는 대국민 서비스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활용촉진서비스가 다소 미흡한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짧은 운영 기간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 수가 적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한 적이 없어요. 웹사이트에 있는 기본적인 통계 기능이 있잖아요. 조회수나 기본 데이터 정도만 웹사이트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 문제의식도 특별히 없어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좀 쌓여야지 뭔가 할 텐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면담자 E)

또한, 국회기록보존소는 본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이 원래 아니에요.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 소속 직원과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법 전문 지원기관이지 대국민 서비스를 하던 게 아니어서 부족한 점이 있죠.” (면담자 G)

5.2.3 의정활동기록서비스 개선점

(1) 검색 및 열람서비스

면담자들은 통합검색 및 검색가이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재 국회와 관련된 여러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면담자 A, C).

“국회기록보존소에는 기록이 많이 모여있지 않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보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회기록보존소의 서비스 내에서 이게 좀 바로 열람되고 검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담자 A)

또한, 분산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검색가이드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완벽한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리서치 도구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서울기록원에 서는 이미 시도하고 있죠. 저는 그런 조직화와 가이드 도구들, 검색도구들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E)

(2) 부가가치서비스

면담자들은 교육 콘텐츠와 연구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의정활동기록은 교육적 가치와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기에, 이를 지원한다면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의정활동기록은 교육 교재로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학년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용 보조 교재로, 역사학이나 사회학과에서도 보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면담자 C)

또한, 면담자들은 국회기록보존소의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의 홈페이지가 단순히 행정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라, 국회기록보존소의 특성에 맞추어 아카이브의 사이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검색과 탐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그냥 일반 행정기관 웹사이트가 아니라 아카이브의 웹사이트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F)

한편, 앞서 부가가치서비스의 핵심 문제로 제기된 국회의원실의 인식 부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의원실에서 기록을 남기는 데 필요한 환경적,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의정활동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중요한 정책결정권자의 기록관리 인식이 중요해요. 기록을 남겨야 하는 대내외적 환경, 인식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인식부터 제고해야 해요.” (면담자 H)

또한, 의정활동기록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면담자는 임기가 시작할 때마다 시행되는 교육 오리엔테이션에서 기록관리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임기 초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년마다 임기가 시작되면 교육 OT를 받거든요. 신입생 OT 받듯이 국회의원들도 OT 받는데, 그럴 때마다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 열람서비스 등의 내용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 초부터 국회의 기록관리가 중요한 거구나, 이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고 국회기록보존소라는 기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면담자 A)

의정활동기록서비스가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효용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기록관리의 효용성은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내가 기증을 했더니 전시회도 해주고 책도 내주고 온라인으로 공개도 시켜주더라. 그리고 나한테 디지털화해서 주더라. 난 그걸 보면서 내 자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증에 대한 효능감을 선사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면담자 F)

(3) 활용촉진서비스

면담자들은 활용촉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이용행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요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록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이용자를 고려해야 하잖아요. 의정활동기록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받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행태를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러니까

국회기록보존소도 현실 분석부터 해야죠. 실제 연간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열람 서비스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견학은 얼마나 오고 있고,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A)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개선점도 논의되었다. 면담자들은 의정활동기록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국회기록보존소의 위상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견학 프로그램이나 홍보 같은 활용촉진서비스가 더욱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의정활동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기록보존소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기증방식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봐요. 국회기록보존소가 의정활동기록을 잘 모아야 진정한 위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야 서비스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A)

서비스 및 수집정책 수립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면담자들은 서비스 및 수집정책이 명확해야 하고,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수집정책은 저작권 관련 사항까지 포괄하여야 하며, 정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의 최상단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정활동기록서비스 수집정책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수집정책은 공표되어야 해요. 수집정책은 저작권 정책까지 다 포괄하는 거고요. 서비스정책도 명확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어디 구석에서 숨겨진 게 아니라, 아카이브 최상단에 공표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면담자 C)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면담자들은 여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수가 바뀌었다고 변하는 정책이 아니라,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요. 현재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만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야 모두 공감하고 유지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G)

6. 의정활동기록서비스 개선방안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기록의 정의 정립’, ‘검색도구 개선’, ‘국회의원실 대상 서비스 강화’, ‘연구지원서비스 확대’, ‘국회기록보존소의 독립성 강화’, ‘이용자 요구 분석’ 등 의정활동기록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의정활동기록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의정활동기록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정책과 매뉴얼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정활동기록을 수집, 관리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활동은 『국회도서관 직제』의 업무 분장 규정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불명확한 의정활동의 정의는 의정활동기록에 대한 수집, 관리, 보존, 활용에 어려움의 발생과 귀결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 의회에서는 기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의정활동기록으로 간주하고, 사적인 성격의 서류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 역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의정활동기록의 수집, 관리, 보존, 활용을 위한 국회기록보존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통해 의정활동기록의 정의와 범주를 확인 받아야 한다. 2011년 전부개정 이후 제자리걸음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기록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검색 도구의 다양성과 편의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의정활동기록서비스는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도구와 기능을 통해 접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CLA와 PA는 이용자가 의정활동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검색가이드를 제공하며, 주제별로 모아 의도적인 검색이 없어도 기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관련 기록의 생산 배경을 설명해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인물별, 생산조직별,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검색 도구가 필요하며, 검색가이드를 통해 이용자에게 분산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안내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활동기록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국회의원실의 의정활동기록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선 면담에서도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회에 소속된 PA에서도 하원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국회기록보존소, 2020)에 따르면,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기록화함으로써 의원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국회의원실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하며, 기록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국회의원실이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록관리가 우수한 국회의원실에 상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기록관리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의정활동기록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CLA와 PA가 서비스 대상으로 연구자, 역사가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회기록보존소의 서비스 대상에 연구자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의정활동기록의 역사적, 학술적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자들의 의정활동기록 연구를 독려,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와 데이터에 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홈페이지 ‘My Library’를 통해 ‘내 기록물보기/열람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일반문서에만 한정되어 있다.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회간행물, 임시의정원 자료를 포함한 더 다양한 기록 콘텐츠가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CLA와 PA의 연구가이드 제공 사례를 반영하여, 연구자들에게 의정활동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활용촉진서비스를 위해서는 국회기록보존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CLA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는 NARA 소속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라,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국회도서관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도서관의 직무에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의 보존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회의 주요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국회도서관이 아닌 국회기록보존소로 재지정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행정부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체제를 발전시킨 것처럼, 국회 역시 국회기록보존소에 국회기록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기타 국회 소속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록관리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록정보와 서비스를 파악하여 서비스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기록보존소는 2016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핵심 이용자와 서비스의 정보요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국가기록원, 2018, NAK/S 21:2018, v1.1)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의 특성과 서비스 대상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도 표준에 따라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를 설정하고, 각 이용자의 특성과 정보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정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록정보서비스의 제공, 지원, 점검, 개선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7. 마치는 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2024)의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4점 만점에서 2점을 받았다. 이는 국민들이 국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정활동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는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설명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회기록보존소가 제공하는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기록의 정의와 특성을 분석하고, 미국과 영국의 의정활동기록서비스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의정활동기록서비스에 대한 인식, 문제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면담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여섯 가지 개선점은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진보를 위한 최소한 기본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기초자료로 삼아 의정활동기록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8호.
 국가기록원. (2018).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NAK/S 21:2018, v1.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규칙 제164호.
 국회기록물관리내규. 국회도서관내규 제318호.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보관리과 (2017).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수집·관리 기본 정책[v.2].
 국회기록보존소 (2020).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국회도서관 (2020). 2020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국회도서관 (2022). 2022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국회도서관직제. 국회규칙 제237호.

국회법. 법률 제19563호.

김남희 (2016). 알 권리와 국회의원 활동기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김세영 (2018). 기록관 내부이용자의 기록이용에 관한 연구: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유승, 김장환 (2013).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81-106.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081>

김유승, 설문원 (2013).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5-48.

<http://doi.org/10.4275/KSLIS.2013.47.4.025>

김장환 (2014). 국회 기록화 전략의 수립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장환 (2018).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5, 39-71.

<http://doi.org/10.20923/kjas.2018.55.039>

김지현 (2013).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2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2.201>

문선희 (2019). 국회 회의록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박선운 (2024. 6. 4.). 의원실 자료는 4년 지나면 쓰레기... '국회 기록물' 관리 이래서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0330003157>

박소정 (2021). 국회기록보존소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정책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안경혜 (2018). 국회 의정활동기록 관리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여상아 (2022). 국회기록보존소 임시의정원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영국 의회기록보존소 '살아있는 유산 (Living Heritage)'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4(3), 329-362.

<http://doi.org/10.22809/nars.2022.14.3.012>

이경선 (2017).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에 관한 검토. 입법학연구, 14(1), 211-233.

이연창 (2007). 인물기록관 구축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이원영 (2004). 의회기록의 특질과 종류. 기록학연구, 9, 110-142. <https://doi.org/10.20923/KJAS.2004.9.110>

이원영 (2005).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22(1), 5-20.

<https://doi.org/10.3743/KOSIM.2005.22.1.005>

이지혜 (2011). 입법기관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장연희, 윤은하 (2024).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좌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187-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87>

장윤서, 김지현 (2021). 국회기록보존소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3), 41-71.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041>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최혜영, 이승일 (2019).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97-121. <http://doi.org/10.14404/JKSARM.2019.19.3.097>

한국행정연구원 (2024).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한은정, 임진희 (2009) 국회의원 활동기록의 특성과 관리방향. 기록학연구, 21, 117-167.

<https://doi.org/10.20923/KJAS.2009.21.117>

Advisory Committee on the Records of Congress (2018). Advisory Committee on the Records of Congress: Sixth Report. Available: <https://www.archives.gov/files/legislative/cla/advisory-committee/sixth-report.pdf>

Parliamentary Archives (2012). Collection & Acquisition Policy. Available:

<https://www.parliament.uk/globalassets/documents/parliamentaryarchives/collection-acquisition-policy-v4-2012.pdf>

Parliamentary Archives (n.d.). About Us. Available: <https://archives.parliament.uk/about-us/>

Pugh, M. J. (2005).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hn, Kyoung Hae (2018). *Improvement Plan of National Assembly Parliament Activity Records*. Master's dissertation, Hanshin University, Korea.

Choi, Hye Young & Lee, Seung-il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Parliament Activity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3), 97-12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3.097>

Committee for the Compilation of the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2002). *21st Century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Seoul: Academia Research.

Han, Eun-Jeong & Yim, Jin-Hee (2009). The Characteristics and Maintenance of Assemblypersons' Activity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117-167. <https://doi.org/10.20923/kjas.2009.21.117>

Jang, Yeonhee & Youn, Eun-Ha (2024).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cords Manag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i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1), 187-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87>

Jang, Yunseo & Kim, Ji Hyun (2021). A Study to Vitalize Academic User Service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3), 41-71.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041>

Kim, Jang-hwan (2014). *A Study on Establishing and Applying a Documentation Strategy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Korea.

Kim, Jang-hwan (2018).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5, 39-72. <http://doi.org/10.20923/kjas.2018.55.039>

Kim, Ji Hyun (2013). A Study on Research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2), 201-2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2.201>

Kim, Nam-Hee (2016). *A Study on Archives and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ivities and Right to Know*.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Korea.

Kim, Se Young (2018). *A Study on the Uses of Records by the Internal Users of Records Centers - with the focus on the Local Governments' Records Cent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Kim, Youseung & Kim, Jang-hwan (2013). A Study on Job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81-106.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081>

- Kim, Youseung & Seol, Mun-Won (2013). A Study on Online Services of the National Assembly's Archival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25-48.
<http://doi.org/10.4275/KSLIS.2013.47.4.025>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4). 2023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 Lee, Kyung Sun (2017). Review on the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Law'. *Journal of Legislation Studies*, 14(1), 211-233.
- Lee, Ji Hye (2011). A Study on Improvement of Archival reference service for Legislative Institu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Lee, Won Young (2004). A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gressiona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9, 110-142. <https://doi.org/10.20923/kjas.2004.9.110>
- Lee, Won Young (2005). Improvement Plan for Internet Reference Services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1), 5-20. <https://doi.org/10.3743/KOSIM.2005.22.1.005>
- Moon, Sun Hee (2019).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for National Assembly Minut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8). Standard for the Public Records Service (NAK/S 21:2018, v1.1).
- National Assembly Act. Act No. 19563.
- National Assembly Archives Records Management Division (2017). Policy for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of Parliamentary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v.2].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20).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 Management Manual.
- National Assembly Library (2020). 2020 National Assembly Library Annual Report.
- National Assembly Library (2022). 2022 National Assembly Library Annual Report.
- National Assembly Library Organization. National Assembly Rules No.237.
-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Bylaws. National Assembly Library Bylaws No.318.
-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ules. National Assembly Rules No. 164.
- Park, Sojeong (2021). A study on Improvemen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y Records Acquisition Policy at National Assembly Archiv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Park, Sunyoon (2024, June 4). Congressional records are trash after four years... That's the way it is with congressional records management. *Hankook Ilbo*,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0330003157>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 19408.
- Yeo, Sang-ah (2022). A Study on Servic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Korean Provisional Assembly Digital Archives': Focusing on comparison with 'Living Heritage' of the UK Parliamentary Archives.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14(3), 329-362. <http://doi.org/10.22809/nars.2022.14.3.012>
- Yi, Yeon Chang (2007).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Personal Archive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Korea.